



美 중간선거 결과 및 영향

□ 美 중간선거 결과,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수성,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탈환 예상

< 미국 중간선거 >

◎ (의미) 대통령 임기 4년 중 2년차에 실시되는 선거로서 집권 국정운영의 중간 평가적 성격과 차기 대선의 재임 가능 여부를 예측

	상 원	하 원
총 의석수	100석(50개 주(州) × 2명)	435석(지역구 대표, 인구 비례)
선출 방식	2년마다 약 1/3명 선출(임기 6년) → 금번 35석(보궐선거 2석 포함) 선출	2년마다 435명 전원 선출(임기 2년) → 435석 선출
주요 권한	고위공무원 임명, 탄핵심판권	예산법안 심의, 탄핵소추권한

○ (개요) 중간선거 전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했으나, 하원 의석수 과반수 이상을 민주당이 확보하면서 現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적 환경 형성

- (상원) 공화당 51석, 민주당 44석, 무소속 2석(민주당 성향), 미정 3석

- (하원) 공화당 197석, 민주당 223석, 미정 15석

※ 선거전 의석수 : (상원) 공 51/민 47/무 2, (하원) 공 235/민 193/공석 7

※ 본 수치는 한국시간 8일 13시 52분 기준으로 작성

□ (영향)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기조 유지, 재정정책 등 일부 영역에서 정책적 추진력 약화,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

○ (무역정책) 양당 모두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인식을 같이해 속도 및 강도 조절은 있겠으나, 現 보호무역 기조 변화는 없을 것

○ (통화정책) 경기부양 정책 기조가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준은 긴축 속도를 높이기보다는 현 수준을 유지 또는 완화할 전망

○ (재정정책) 민주당이 예산법안 심의권한을 가지고 있는 하원을 장악함으로써 트럼프 정부의 2차 세제개편안*의 입법화 등에 추진력 약화 불가피

* 개인소득세 최고세율(39.6 → 37.0%) 인하의 한시적(~'25년) 적용을 영구화 등

- (2차 세계개편)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축소를 통한 부자 감세정책이라고 지속적으로 비판해 입법화에 상당부분 지장 예상
- (인프라 투자*) 양당이 이미 합의한 사항이나,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규모 축소 또는 추가 재원 마련 문제에서 양당 마찰 소지
 - * '19년부터 향후 10년간 약 \$1조(보조금 \$2,000억中 '19년 \$450억 예산편성) 투자 계획
- (부채한도 증액)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, 재정절벽 재현 가능성 상존
- (금융시장)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'공화당 상원/민주당 하원' 시나리오로 전개되어 금융시장 변동성은 크지 않을 전망
- (대북정책) 민주당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고 있어 북미간 대화 기조는 지속되겠으나 대북제재 완화 및 협상 타결까지는 난항 예상

<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및 금융시장 영향 >

부 문		추진력 ^{주)}	영 향
무역정책		-	• 큰 변동성은 없겠으나, '19.1월 \$2000억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(10 → 25%) 보류 가능성
통화정책		-	• 경기부양책 추진에 다소 제동이 걸림으로서 현 수준 유지 또는 긴축 속도가 완만해질 가능성
재정 정책	2차 세계개편	↓	• 입법화 지연 혹은 시행 가능성 감소
	인프라 투자	↓	• 양당 합의된 사항으로 지속 추진되나, 투자규모 축소 혹은 추가 재원 마련에는 차질 우려
	부채한도 증액	↓	• 연방정부 부채는 이미 한도(\$20.5조)를 초과한 상황이며, 향후 한도증액 추진에는 차질 예상
금융 시장	주식	-	•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투자심리 개선 및 상승(제한적)
	채권	-	• 경기둔화가 예상되어 장기금리 소폭 하락(단기금리 상승)
	외환	-	• 親성장정책 기조 약화로 달러 소폭 약세
대북정책		-	• 기조 변화는 없겠으나, 대북제재 완화 및 협상 타결까지는 어려움 예상

주 : 추진력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의 강화(↑), 약화(↓), 중립(-)을 의미
 자료 : 한국은행, 각종 언론기사 등

□ (전망) 미국의 대외 및 통화 정책 경로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충격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

- 단, 대북정책의 기조 변화 등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예의주시 필요
-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지출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재정적자 증가폭은 축소되고, 경기부양정책 위축으로 미국 경제성장률은 둔화 전망

(작성자 : 경제금융팀 대리 김상유 sykim1111@ibk.co.kr / ☎02-729-6196)